

Global News *PICK!*

글로벌 뉴스 픽!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국내/외 뉴스를 골라보았다.



Pick 1. 성(젠더)평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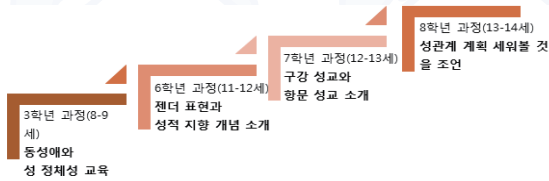
캐나다



한국

급진적 성교육을 폐지하고 20년 전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간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LifeSiteNews는 2018년 7월 11일자 속보 기사를 통해 신임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전임자인 캐슬린 윈(Kathleen Wynne) 주지사가 추진했던 성교육 교과 과정을 9월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온타리오주의 성교육 과정은 1998년 개정된 이후 17년간 유지되었으나, 윈 주지사가 집권 이후 급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www.campaignlifecoalition.com>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일찍이 자위행위와 항문 성교, 구강성교 등을 가르치는 것은 해당 연령에 부적절한 교육이며 이는 성적 방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었다. 성평등(젠더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급진적인 성교육의 문제로 인해 과거 성교육 체제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온타리오주의 결정은 최근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차 국가인권기본정책 국무회의 통과, 본격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지난 4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시행/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동성애 인권교육/ 기본권 주체 확대 등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집회, 청와대 청원, 토론회 등이 이어졌으나 결국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최종본에는 그동안 수정을 요구했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양성평등(sex equality)과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 혼용에 대한 답변 요구에 법무부는 두 용어가 모두 'gender equality'에 대한 번역으로 동일한 의미라고 답변하여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계없이 NAP는 8월부터 바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 적용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가 정부 각 분야의 인권 개선 방향을 정하는 전국가적 인권정책 5개년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대국민 인권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2번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2017~2021년 NAP 초안을 폐기 후, 2018~2022까지의 새로운 제3차 NAP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47페이지)	•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에 따른 성차별적 뜻풀이, 용례의 보완 및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 등재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44~45 페이지)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48 페이지)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298 페이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추진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293 페이지)	• 교육 콘텐츠 및 강의 인력풀 확보: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
성평등 정책 시행(45, 46, 47, 48, 49, 101, 102, 110, 299, 303, 527, 541 페이지 등)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 온라인 이용자·사업자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Pick 2. 차별금지법



미국

케이크 가게 주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미국 콜로라도주(州)에서 마스터피스케이크샵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씨는 제빵 전문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6년 전인 2012년 7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게이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건으로 진정을 당했다.

당시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는 필립스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필립스는 미 연방대법원에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4일, 미 연방대법원은 인권위의 법적 조치가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이 필립스의 케이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날, 필립스는 또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트랜스젠더 여성인 오펜 스카디나 변호사는 케이크샵에 전화를 걸어, 케이크의 결과안을 각각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만들고 사탕과 마리화나, 자위 도구 등의 장식품을 단 성전환 기념 및 생일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다. 주문을 받은 여직원은 가게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주문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케이크샵이 소매업자가 성정체성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편의시설법을 위반하여 차별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ColoradoPolitics는 2018년 8월 22일에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온 자유수호연맹 법률단체가 필립스씨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지속적인 박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인권위측 변호사와 콜로라도 주지사 등을 고소했다고 보도하였다. 필립스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그의 굳건한 종교적 신념은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영국정부, 성별이 출생 시 결정된다고 말한 의사 해고

MailOnline은 2018년 7월 8일자 기사에서 영국 정부기관 국민보건서비스 NHS에서 의사로 26년간 일한 데이비드 맥케레 (David Mackereth) 박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별이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해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보도하였다.

박사는 올해 5월부터, 노동연금부에서 장애인 급심사자로 일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거치는 중이었다. 그의 역할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 그들의 건강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다. 상급자의 지시로 보고서 작성 시, '자신이 선택한 성별에 따라 환자와 고객을 지칭하고 생물학적 성과 불일치하는 대명사를 사용' 하도록 강요당할 때, 그는 성별이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됨을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연금부 대변인은 박사의 종교적 신념이 영국의 차별금지법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에 어긋남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맥케레 박사는 자신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침해 당했다고 말하며, 인류가 수세기 동안 믿어온 성별이 출생 시 결정된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견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Pick 3. 종교의 자유

미국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미 정부

자유 상징인 미국은 최근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Christian Today 뉴스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회의에는 350명의 공직자와 8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모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포토맥 선언(Potomac Declaration)’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선량한 국민과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며 심오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미 법무부 내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위원회(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17년 10월에 발표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지침서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비롯하여 공무원도 업무 수행시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한 미국의 움직임은 헌법상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외 10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종교행위 강제 금지’에 관하여 일부조항을 새로이 삽입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은 제35조의3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또한 제55조 중 “제13조를”을 “제13조 및 제35조의3을”으로 변경하면서, 종교행위를 강제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고, 종사자는 자발적으로 시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또한,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거주자 및 이용자’를 보호 대상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설 관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그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Pick 4. 태아의 생명권



미국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관한 주(州) 헌법 수정안 투표 예정인 앨라배마 주(州)

올해 11월 6일, 앨라배마 주 유권자들은 매트 프리디(Matt Fridy)의원이 발의한 앨라배마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LifeSiteNews의 2018년 7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헌법수정안은 앨라배마 주의 공공정책으로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포함한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앨라배마 주 헌법 상 낙태의 권리나 정부자금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안건은 2017년도에 앨라배마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그 해 4월 25일에 찬성 73표 반대 24표 기타 8표로 최종 채택되었고 주무장관에게 전달되었다.

발의자인 프리디 의원은 현(現) 앨라배마 주 헌법상 태아의 생명을 비롯한 권리의 중요성과 낙태의 권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헌법 수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앨라배마 주의 공공정책을 명시하려는 취지임을 밝혔다.



Abortion 낙태



아르헨티나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부결된 아르헨티나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임산부 스스로 의료적 필요 없이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표결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BBC 뉴스 코리아의 2018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하원은 2018년 6월 중순경 22시간의 논쟁 끝에 찬성129표, 반대125표, 기권 1표로 가결했지만, 상원은 지난 8월 8일 15시간 이상에 걸친 법안 토론 끝에, 이튿날인 9일 상원 재적 의원 72명 중 찬성 31표, 반대 38표로 본 법안을 부결하였다.

한편, 상원 투표 전인 7월 31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부청사 앞 마요 광장에서 ‘생명을 위한 의사’ 단체 소속 의료인 1천여 명은 “나는 의사이지,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등의 구호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법안 통과와 지지자들은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선택적 낙태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를 7차례 시도했던 국가로 이번에 진행된 의회 투표결과 의미의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낙태죄 폐기 헌법 공개변론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형법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근거로 국가의 생명보장의무를 주장, 또한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진성 헌재 소장 및 4명의 헌재재판관들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이 된 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Pick 5. 북한인권



한국

사실상 유명무실 북한인권법

2016년 3월,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세워졌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로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연구·정책 개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같은 해 10월 통일부는 재단 사무실 마련 후 2명의 상주직원을 파견했으나, 약 2년간 국회의 이사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폐쇄되었다. 지금까지 매달 약 6300여만원, 총 13억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또 계약 조기 종료로 인한 위약금 약 8000만원, 사무실 원상 복구비 약 1억원으로 정부는 총 15억원 정도의 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직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 대남선전매체를 통하여 “이전 보수 적폐의 전철”을 밟는다고 지탄했다. 북측은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고위급 회담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평화의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때에 남측은 “과거의 낡은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구질 구질한 모략 광대극에 현혹돼 있다”라고 말하며, “북한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매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인권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편, 작년 9월 통일부 직제개편 당시에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인도협력국’으로 개편되면서, 북한 인권보다 대북 지원에 더 치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